

할 일 태산인데... 정쟁뿐인 국회

한국당,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비난... 靑 수석 경질 요구
민주 “산불·포항지진 후속 대책 시급...野, 4월국회 응해야”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으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일 서로를 향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강원산불 후속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다”며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말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미세먼지·경기 선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거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껍뚝하는 것도 (한국당은) 그만둬야 한다”며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식 정책위의장은 특히, 재해 추경에 분리해서 편성하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한마디로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절름발이 추경을 하지는 소리에 불과하며 추경편성을 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 ‘정쟁의 달인’, ‘정쟁 제조기’라는 비난도 퍼부었다. 김종민 의원은 “황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라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께하라는 야당 대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느 정치인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황교안의 거친 말이 욕일승천의 기세다. 정치적 리더십을 채 갖추기 전에 거친 말 구상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며 “거친 언사를 일삼다 퇴장당한 홍준표 전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철회 주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강병원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박영선·김연철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됐어도 한국당은 임명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정동영 DJ묘소에 나란히

자유한국당도 파상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의) 정점인 대통령이 사과하기는커녕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조국 수석의 경질도 전혀 없다”며 “이 정부의 잘못된 인사 검증 실패, 청문회 패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 경호처장 갑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 후 청와대에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문’

에는 문 대통령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 외에도 ‘청소 갑질’ 의혹이 제기된 주영훈 경호처장 파면, 김의겸 전 대변인 대출특혜 의혹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박상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혜 씨 이주 의혹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 ‘해외이주 갔는지 안 갔는지 말 못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말장난 할 사안이 아니다”며 “해외이주 배경과 사위의 부정 취업 의혹, 경호예산 논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지원 “손학규 대표 이젠 결단할 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해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엉겨주춤한 상태로 봉합해 나갈 수 있겠느냐”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 손 대표가 결단을 내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당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



서 봤을 때 결국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

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결합 내지 연대를 염두에 둔 민주평화당의 군불때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천정배 “기무사 불법감청 윗선 재수사 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9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의 불법 감청을 둘러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천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14년 6월 19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미래부 전파 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파행

법사위, 靑 장관 임명놓고 공방... 한때 정회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을 놓고 거친 공방을 거듭한 끝에 정회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가열되자 결국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이념편향 문제가 화두가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현재의 진보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만한 잣대가 마련돼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문 후보자는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11일 헌재 선고를 앞둔 낙태죄 위헌여부와 관련해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분적 허용 입장을 나타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소방관 국가직 전환 놓고 또 ‘네 탓’

민주 “한국당이 입법 막아”...한국당 “부처간 조율 미흡”

여야는 9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경제국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법을 열렁뿔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

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강원도 산불 진화 등 대응과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컸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안상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0 1 7 8 9 9 0 0
0 0 0 0 0 0 0 0 0 0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1+ 3point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2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2019. 4. 16(화) 18:00시 限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3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4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5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